

해남 '3천만원 살포설' 표심 요동

선관위 고발 검찰 수사 착수...민후보측 "사실 무근" 기자회견

4·9 총선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표심이 민주당 민화식 후보의 '돈 살포설'로 요동치고 있다. 특히 민 후보의 텃밭인 해남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박희진 전 해남군수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주민 55명이 검찰에 소환되는 등 한바탕 흥역을 치렀던 터라, 더욱 큰 불안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4일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민주당 민화식 후보측이 경선을 앞두고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3천여만원을 뿌린 정황

이 선관위에 포착돼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화식 후보는 이날 오전 해남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언론 보도나 선관위에서 밝혔던 완도와 진도에서 발생한 고액 살포 사건은 사실 무근"이라며 금품 살포설을 강력 부인했다.

민 후보는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금품 살포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고 가족이나 측근이 금품을 살포할 상황도 아니다"면서 "금품 살포 소문은 후보를 매도하고 민주당을 왜곡하는 행위이며, 일부 언론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통합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민 후보의 주장을 믿고 검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중인 김영록 무소속 후보는 민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돈 살포'를 선거 막판 주요 이슈로 몰아가고 있다.

김 후보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돈 선거의 망령을 되살려 낸 장본인들이 언론의 허위 사실 유포를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

고 있다"며 "민 후보의 배우자와 최측근의 불법 금품수수, 대표 행위가 선관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만큼, 민 후보는 선거구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해남YMCA와 해남군 농민회, 해남기독교회협의회, 해남불교사회연합회 등 해남지역 20여개 시민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결과 공개와 민주당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해남읍에서 거주하는 김모(52)씨는 "선관위와 검찰이 돈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자체가 해남지역의 수모"라면서 "선거철만 되면 불법선거로 얼룩지는 해남의 지역 이미지가 또 다시 실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총선 선거인수 3,779만6,035명 30~40대가 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18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모두 3천779만 6천3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실시한 17대 국회의원선거의 3천559만 6천497명보다 219만 9천538명 많은 것으로 6.2%포인트 증가한 수치며, 17대 대통령선거 때의 3천765만 3천518명보다는 0.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별로 30대와 40대가 각각 22.7% (857만7천587명), 22.6% (852만9천320명)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으며, 20대 19.2% (725만9천691명), 60대 이상 18.3% (691만136명), 50대 15.6% (589만6천242명) 순이었다. 19세 유권자는 62만 3천599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829만855명, 서울 807만8천355명, 부산 284만1천445명 순으로 많았으며, 제주도가 41만3천904명으로 전국에서 선거인수가 가장 적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선거인수는 모두 1천838만7천909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8.7%를 차지했다. 광주와 전남의 선거인수는 각각 103만4천393명, 149만6천888명으로 전국의 2.7%, 4%를 차지했다.

한편 18대 총선 유권자는 3월21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수 4천931만 5천6명의 76.6%이며, 남자 49.2% (1861만명), 여자 50.8% (1천918만 6천35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범죄집단 몰린 건 언론 탓”

이건희 회장 특검 출두 경영권 불법 승계 관여·비자금 조성 의혹 부인

이건희(66) 삼성그룹 회장이 4일 오후 2시 비자금 및 경영권 불법승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등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경영권 승계 의혹과 비자금 조성·관리 의혹,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조사했다.

이 회장은 출두 현장에서 에버랜드 CB 발행을 지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한 적 없어요"라고, 경영권 승계

과정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아니오"라고 각각 짧게 답했다.

또 글로벌기업인 삼성그룹이 '범죄집단'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강한 어조로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 걸 음민 여러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란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고 진심이든 아니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사태에 책임을 느끼시느냐"는 질문에 "그분 회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느낀다"고 답변한 뒤 7층 조사실로

향했으며 조준웅 특검을 짧게 면담한 뒤 조사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윤정석·조대환·제갈복석 특검보 등 3명과 검찰에서 파견된 강찬우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번갈아 가며 의혹 분야별로 조사를 받는다.

윤정석 특검보는 "조사할 분야가 상당히 많다. 밤 11시나 자정 가까이까지 진행될 것이다"라며 포괄적으로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삼성그룹 총수여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삼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ℓ 당 1천580원...경유가격 또 최고치 경신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내 경유 평균가격이 또다시 휘발유 가격 상승폭을 크게 웃돌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전국 1천1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석유제품 가격조사 결과 경유 평균 가격은

ℓ 당 1천580.75원에 달했다. 이는 전주에 비해 31.99원 뛴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광주는 이날 들어 경유값이 3.96원 오르면서 평균 가격도 1천545.69원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경유값 급등은 같은 기간 6.92원이 내린 휘발유가격과 대조를 이룬 것

로, 가격차가 130원까지 좁혀졌다.

이에 따라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002년까지만 해도 배 이상 차이가 나던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수준이 6년 만에 엇비슷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의 실내 등유가격은 전주보다 37.79원 오른 1천143.99원, 보일러 등유는 40.33원 상승한 1천148.72원으로 조사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시설

철저한 방역체제로 AI 확산 차단해야

국내에서 13개월만에 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김제 소재 한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의 닭 폐사 원인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형질형 H5N1)로 최종 판정했다. 닭·오리 사육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전국에 '주의'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AI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비상근무에 들어가 전북과 인접한 담양, 곡성, 구례, 영광, 장성 등 5개 군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닭·오리농장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AI가 확산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건의 AI가 발생해 460 농가에서 기르던 280여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은 580억원에 달한다.

불안심리에 따른 소비 위축은 더 큰 문제다. 닭과 오리고기 소비가 줄면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2006년 11월 AI가 발생해 깊은 닭고기 일본 수출길이 지난해 7월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뒤 다시 열린 적도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확산을 막는 수밖에 없다. AI는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그 피해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할 수 없는 지구적 재앙이다. 당국은 AI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발병 원인과 철저한 규명해야 한다. AI가 발생한 닭체 등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AI 예방활동을 펼쳐왔던 지역이다. 특별 방역기간이 끝난지 한달여만에 AI가 어떻게 발병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

시민 안전 위협하는 CCTV 운영비 갈등

최근 어린이 성폭행과 납치 등이 잇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구청, 경찰이 방법을 CCTV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운영비 부담을 서로 떠넘기는 바람에 4개월이 넘도록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월 운영비 300만원 때문에 시민 안전은 나 몰라 하는 이들의 행태가 한심하다 못해 어이가 없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 CCTV 30대를 설치키로 하고 광주시로부터 3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월 300여만원에 이르는 운영비 부담을 시와 구청, 경찰 어느 한쪽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설치비용은 부담하지만 운영비용은 각 구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각 구청은 CCTV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찰의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운영비 부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와 구청의 이 같은 주장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타지역의 경우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시비로 시내 600여 곳에 CCTV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부산시의 행정과는 너무 대비된다.

광주시와 구청은 대당 10만원 꼴밖에 안 되는 운영비가 시민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광주는 설치된 CCTV가 32대로 인건 89대, 부산 74대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치안 공백이 많을 수밖에 없어 CCTV 추가설치는 시급한 현안이다.

광주시와 구청, 경찰은 시민안전을 위해 즉각 협의에 나서 CCTV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송민순 前외교·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광주 U대회 유치 해외교섭 활동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과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중앙 인사들이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를 위해 잇따라 해외교섭 활동에 나섰다.

송민순 전 장관은 오는 16일부터 9일 동안 그리스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해 각국의 외교·체육계 인사들을 만나 광주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다.

광주시는 송 전 장관이 주서베를린 부영사, 주폴란드 대사 등을 역임한 '유럽통인만큼 그의 유럽 방문이 U대회

유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최근 박광태 광주시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30년 이상 쌓아온 외교 인맥을 총동원, 유치 위원으로 적극 참여해 광주 유치를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광주 하계U대회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 31일부터 오는 6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알제리, 우간다,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해 광주를 지지해 주도록 호소하고 있다. /정승희기자 who@kwangju.co.kr

여수시, 오동도·향일암 등 관광 편의시설 개선 나서

'여수 엑스포 개최지 맞나' 보도(본보 4일자 2면) 이후 여수시가 관광 편의 시설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섰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동도와 향일암 등 주요 관광지 주변의 숙박시설과 음식점소 등의 위생 상태와 공중 화장실, 안내판 등을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안내판에는 한국어와 함께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을 병기하고 영어로 된 별도의 외국인 전용 관광안내도를 작성해

외국인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관광객이 최고의 손님이라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일본 크루즈선 '니븐마루호'를 타고 여수에 온 일본 관광객들이 지난 2일 오동도 등지를 관광할 당시 화장실이 잠겨있고 영문·한문 안내 표지판이 없어 겪은 불편 등을 취재 보도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빛의만평

- 김중두

제발 이것도 좀 나서 주시지

홍도, 반세기만에 건축규제 풀렸다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구역 완화...관광지 개발 활력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홍도(신안군 흑산면)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돼 국내 최고의 해상 관광지로서 거듭나게 됐다.

신안군은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반세기 동안 문화재 규제 속에 묶여 있던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밀집 마을 지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주민들은 건물 층수를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용적률은 100%에서 150%로 각각 높여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건축주도 형태도 신안군의 계획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매년 2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사계절 해상

관광지 홍도는 섬 전체가 1965년 4월 7일 천연기념물 제 170호로 지정되면서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도 과도한 규제로 건축 행위가 제한받아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 시설이 열악해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홍도는 건축물 대부분이 1960년대에 축조돼 낡은 탓에 관광객들의 체류를 어렵게 했고 무분별한 불법증·개축으로 건물이 조잡해 미관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주민들은 불법 증·개축으로 '범법자'가 되기도 했고 과도한 규제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 崔秉	
사정 許宰喆		편집 金東永	
편집 申港樂		편집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사 회 2 부	2200-619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 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주요목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